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관계 전망

1. 제1차 북·일 정상회담 이후 납치문제의 전개
2. 제2차 북·일 정상회담
3. 납치문제와 북·일관계의 향후 전개 전망
4. 고려사항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따라 납치문제가 일부 해결됨으로써 북일 수교 교섭에 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핵, 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앞서서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리라고는 보기 어려움. 한국은 납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북일 양측은 물론, 6자회담의 성사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장기적인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문제인 점에 비추어, 핵과 납치문제를 분리 해결하는 바탕 위에서 한일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일본의 중개자 역할을 장려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장기전략에 대한 한일간 전략적 공감대 확산 노력이 배증되어야 할 것임.

1. 제1차 북·일 정상회담 이후 납치문제의 전개

가. 납치문제의 발생 경위

- 70년대말, 80년대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급속히 증가함.
 - 북한의 특수공작기관에서 공작원 일본어 교육, 신변은폐를 주목적으로 납치함. 해변에서 납치된 경우는 공작선을 목격했거나 공작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납치한 경우도 있음.
 - 납치된 일본인의 일부는 본인의 동의하에 입북한 경우도 있음. 북한에 단순 호기심이나 금전변제 등의 목적으로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경우가 이에 해당함.
 -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납치된 것으로 확인된 13명 중 7명은 공작원에 의해, 1명은 청부업자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본인의 동의하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짐.
- 87년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였던 이은혜 문제가 이슈화됨.
- 납치문제는 97년경부터 전면적으로 언론에 부상함.
 - 95년경 카토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내 온건 보수세력은 사회당과의 연립정권 유지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시야에 둔 대북접근 움직임을 보인 바 있음.
 - 자민당내에서 사회당과의 연립유지에 부정적이던 보수연합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관계 정상화 움직임에 쐈기를 박기 위해 전면으로 부각시킨 이슈가 납치문제임.
 - 이후 납치문제는 주로 자민당내에서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 또한 납치문제가 북일간 국교정상화 속도조절을 위한 논리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음.
- 90년대 후반 이후 납치문제는 일본내에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선결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었음.

나. 9·17 평양선언 이후 납치문제의 전면적 급부상

-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인 납치문제가 전일본 국민의 관심사로 변모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 문제 해결을 도모했던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 이후임.
- 김정일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생존자의 귀환, 납치문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문제를 대범하게 해결한 것으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납치된 일본인중 5명은 생존해 있지만, 8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본 국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1) 사망자의 사인규명에 대한 설명

- 일본 정부는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부조사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측으로부터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8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설명을 청취함.
- 이에 의하면, 북한 적십자사는 2002년 3월부터 행방불명자로 분류된 일본인 납치의혹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하였고, 2002년 8월 북한 국방위원회 특별지시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2002년 9월 16일에 집계하였다고 함.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한 9월 17일에 그 결과를 일본측에 전달하였음.
- 그러나, 일본측은 북한측이 제공한 10명의 사망원인, 시기 등에 대해 부적절한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항의함. 북한이 밝힌 납치 일본인의 사망일시와 원인은 <표 1>과 같음.
- 북한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가족은 이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그 후의 목격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일부의 생존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음.
- 일본측은 2002년 10월 29, 30일 양일간 열린 제12차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안부가 불확실한 자들에 대한 150개의 의문점을 북한측에 조회함.

(2) 납치생존자의 일본 귀국과 북한 송환 거부

-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중 생존자의 2주간 일본여행을 허용한다는 구실하에

2002년 10월 15일 납치피해자 5명의 일본 귀국을 허용함. 이들 생존자 5명의 인적사항은 <표 2>와 같음.

<표 1: 북한이 밝힌 납치 일본인의 사망 일시와 원인>

분류	성명	연령	납치일자	사망일자	사망원인	비고
사망	이치카와 슈이치	23	78.8.12	79.9.4	해수욕장서 익사	북한 공작원 안명진이 91년 9월 목격 증언
사망	마스모토 루미코	24	78.8.12	81.8.17	심장병	안명진이 88-90년 김정일 군사대학에 같이 있었다고 증언
사망	하라 다아아끼	43	80.6.17	86.7.19	간경변	03년 8월 납치실행범 신광수 체포
사망	다구치 야에꼬	22	78.6.29	86.7.30	교통사고	83년경 김현희에게 일본어 교육한 이은혜로 추정
사망	이시오카 가오루	22	80.6.7	88.11.4	가스중독	85년 11월 27일 아리모토와 결혼
사망	아리모토 게이꼬	23	83.7.15	88.11.4	가스중독	요도호 납치범에 의해 유괴됨
사망	요코타 메구미	13	77.11.15	93.3.13	병원서 자살	
사망	마즈기 가오루	26	80.6.7	96.3.23	교통사고	북한이 유골 제시했지만 60대 여성의 가능성 높아
행방 불명	구메 유타카	52	77.9.19			04년 1월 납치지시범 김세호 체포
행방 불명	소가 미요시	46	78.8.12			03년 10월 경찰청이 소가 히토미와 함께 납치피해자로 인정

<표 2: 생존자 5명의 인적사항>

성명	납치시기	결혼 날짜	상대
치무라 호시	78년 7월	79년 11월 25일	하마모토와 결혼
하마모토 미키에	78년 7월		
하스이께 가오루	78년 7월	80년 5월 15일	오쿠토와 결혼
오쿠토 유키꼬	78년 7월		
소가 히토미	78년 8월	80년	미군탈주병 켄킨스와 결혼

- 일본정부는 북한의 납치 사실 자체가 범죄행위이며 원죄에 해당하므로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2002년 10월 24일 납치피해자 5명에 대해 일본에서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함.
- 북한은 여러 차례 일본이 약속을 위반하고 5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고 반박, 항의함.
- 일본 정부는 2003년 7월 31일 납치문제 전문 간사회에서 생존자 5명의 가족 귀국은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시점까지는 실현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 그리고 사망자 10명에 대한 정보제공도 요구할 것임을 정부 방침으로 결정함.

(3) 납치 관련 단체의 결성 및 적극적인 활동

- 일본내에서는 납치 생존자들이 일본에 돌아온 이후 납치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단체들이 결성됨.
- 우선 납치되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5명 및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0명의 가족과 친지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통칭 가족회)가 결성되어 납치문제에 대한 직접적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됨.
- 일본 국회내에서는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초당파적인 의원 모임인 ‘납치의원연맹’이 결성됨.
- 자민당내 매파이자 아베 신조 현 간사장과 가까운 히라사와 의원이 사무국장을 맡음.
- 또한 일반 시민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구하는 모임: 현 회장 아라키)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
- 이들 ‘구하는 모임’은 전국적으로 납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전개함.
- 이 모임이 2003년 1월 10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 납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것은 120건 150명 이상에 달하며, 조사의뢰된 행방불명자중 가족이

발표를 승인한 것도 40명에 이른다고 실명을 제시함.

- 그러나 이들 행방불명자들이 북한에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임. 참고로 일본 국내에서 가출 수사를 의뢰받은 행방불명자는 2001년 한해만도 10만여 명에 이룸.
- 일본 정부도 내각 관방실에 납치문제를 전담하는 '참여'급 직책을 신설하고 납치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함.

다. 2003년 말경부터 납치문제에 대한 국면 전환

(1) 납치문제 장기화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부담

-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방북 이후 일본 국내에서 TV 등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북한두들기기' 및 '북한 해쳐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급속도로 증대됨. 납치문제로 인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여줌.
- 이는 드라마, 음식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산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양상으로 나타남.
- 한편 북한에 대한 부정적 관심의 증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납치문제의 조속 해결이라는 과제를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정부의 중요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게 됨.
-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함.
- 북한도 납치문제를 계속 방치해다가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더욱 늦어지고, 나아가 교섭 과정에서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을 간파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공식적인 고압적 태도와는 달리 일본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짐.

(2) 일본의 북한 압박카드 준비

- 북한은 납치문제가 해결된 것임을 계속 주장하면서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여왔으나,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기는커녕 각종 국제기구나 포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

라 북한도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음.

- 또한 일본 정계에서 북한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압박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송금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외환법 개정 움직임, 만경봉호의 일본 입국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선박 입국금지법 등은, 성립될 경우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깨달은 것으로 보임.

2. 제2차 일·북 정상회담

가. 회담 준비의 경과

- 북일간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2003년 12월경부터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했음.

(1) 2003년 12월 히라사와 의원, 중국 북경회담에서 가족귀환 문제 상의

- 납치의원연맹 사무국장인 히라사와 자민당원이 중국 북경을 방문, 북한 정태화 북일교섭 담당대사, 송일호 외무성 부국장과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납치문제 해결을 타진함.
- 이 회담에서 5명 납치 생존자의 가족 영접안이 처음으로 부상됨. 일본에서 북한으로 생존자들이 영접을 나오면 그들 가족을 일본에 돌려보낼 수 있다는 안임.
- 일본 외무성은 북일 채널이 정부간 채널로 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납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내림.

(2) 2004년 1월, 2월 외무성 접촉에 의한 의사 확인

- 일본외무성 관리 5명은 2003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 마약범죄 용의자에 대한 상담을 구실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과 비밀리에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의향을 타진함.
- 이들 선발대의 타진에 이어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타나카 히토시 외 무성 심의관과 야부나카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숙의함.
 - 이 회담에서 일본측은 사망자 10명에 대한 합동진상조사 위원회 설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3) 2004년 4월초 야마사키 전 간사장 대련방문 및 의견 조정

- 고이즈미 총리의 맹우이자 자민당 전부총재인 야마사키와 히라사와의원이 2004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정태화 교섭담당대사와 접촉함으로써,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강력히 시사됨.
- 이후 야마사키 전 간사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6년 9월까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어한다는 고이즈미의 의도를 수 차례 내비침.
 - 야마사키는 회담 장소에서 ‘고이즈미 정권내에 국교정상화를 합시다. 남아 있는 시간은 2006년 9월까지로 최대 2년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함.

(4) 2004년 5월 4-5일 타나카, 야부나카-정태화 북경회담

- 최종적으로 2004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타나카 심의관과 야부나카 국장이 북경에서 정태화 대사와 재차 접촉함.
 - 정태화대사는 이 자리에서 ‘외상이나 관방장관이 와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교체되면 끝장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함.
 - 북한측은 일찍부터 ‘수상이 오지 않으면 가족을 돌려보내지 않겠다, 외상이나 다른 사람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함.
- 고이즈미 총리는 이들의 회담에 앞서 직접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여 납치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과 상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고이즈미 총리는 4월 28일 타나카 심의관을 총리 집무실로 불러 스스로 방북할 수 있다는 구상을 설명했다고 함.

(5) 2004년 5월 14일 고이즈미 총리 평양방문 발표

- 북한측이 일본에 5월 13일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승인을 공식 통보했다고 함.

나. 고이즈미 방북의 배경요인과 방북발표의 타이밍

(1) 국제정치적 역학

- 미일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일본인 자국민보호라는 인도적 처사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얻어낸 것으로 보여짐.
 - 4월 중순 체니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방문에 이어져 나온 조치들로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도 고이즈미의 방북은 유용한 수단일 수 있었음.
 - 5월초 아베 자민당 간사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측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됨.
-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로 소외된 일본이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여짐.
 - 김정일의 방중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고이즈미가 평양을 재차 방문하겠다고 나선 점에 비추어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북·일 양국간 역학

- 4월말 북한 룡천역 사고가 발생한 후 일본은 1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행한 바, 룡천역 사고를 전면에 내세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재법안들이 성립 내지는 준비됨에 따라 북한이 압박 증대를 회피할 필요성에 직면함.
 - 일본 국회는 2004년 2월 9일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외환법을 개정함.
 - 2004년 4월 6일에는 자민당이 만경봉호 등 북한선박을 염두에 둔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함.

(3) 국내정치적 효과 기대

○ 여당의 정국주도권 회복

- 5월 7일 후쿠다 관방장관이 연금 미납문제로 사임하고, 7개 부처 대신들의 국민연금 미가입문제가 정치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고이즈미 내각이 어려움에 처한 시점이었음.
- 또한 고이즈미 수상 본인의 연금미납 상황이 주간지에 의해 공표된 것이 5월 14일로, 관심의 전환을 통한 정국주도권 회복의 의미도 보여짐.

○ 야당에 대한 정치적 견제

- 역시 연금 미납문제로 사임한 칸 나오토에 이어 오자와 이치로가 민주당 당수로 사실상 취임할 수락한 날이 5월 14일로서 야당이 주목받는 것에 대한 견제수단으로도 유효했음.
- 오자와 자신도 연금미납이 문제가 되어 이틀후 사임하고 오카타 간사장이 5월 18일 민주당대표로 선출됨.

○ 7월 11일의 참의원선거를 향한 외교적 업적 축적 및 과시

- 가족 8명을 데려오는 데 성공할 경우 참의원 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세일즈가 가능하다는 고려도 있었다고 봄.

다. 제2차 북·일 정상회담 개최

○ 취임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고이즈미 총리가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

○ 2004년 5월 22일 9시 09분 평양 순안공항 도착

- 김영일 외무 차관이 영접함. 북일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차관으로서 이번 회담을 양자관계에 한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짐.
- 2002년 9월 17일에는 김영남 최고회의 의장이 영접했음.

○ 2004년 5월 22일 11시 2분부터 12시 35분까지 대동강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짐.

- 대대적인 수리후 최초로 고이즈미와의 회담장소로 사용하여 외교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임.

- 일본측에서는 고이즈미 총리 외에 야마자키 관방부장관, 타나카 히토시 외무심의관, 야부나카 히토시 국장이 배석하였고, 북한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강석주 외무차관이 참석함.

라. 회담 결과

(1) 납치생존자 가족귀환 문제

- 납치 가족중 생존자 5명이 일본으로 당일 귀국함.
 - 이들은 하스이케씨 가족 2명과 치무라씨 가족 3명임.
- 소가 히토미씨의 남편인 찰스 젠킨스와 2명의 딸은 일본으로의 귀국을 거부함으로써 젠킨스의 입장에 맡기겠다, 직접 설득해도 좋다, 제3국에서 만나게 하겠다 등의 방식을 제시함.
 -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후 1시간에 걸쳐 직접 설득
 - 북경이나 제3국에서 소가씨와 재회하여 상의할 것을 확약
 - 미국정부는 젠킨스씨가 시한에 관계없이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임을 발표함.
- 생존자 5명은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공항에 당일 오후 9시 20분 도착함.

(2) 안부불명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 일본측은 2002년 9월 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일본측에 제시한 사망원인 및 행방불명 상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하고 재조사를 요구함.
-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백지상태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재조사시 일본측 참가에 대한 확약은 없었다고 봄. 확정적인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움. 일본측은 일본의 참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북한측은 자신들이 조사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임.

(3) 대북 인도적 지원

- 일본측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기관을 통하여 식량 25만톤과 미화 1,000만불 상당의 의료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식량 25만톤은 70억엔, 1,000만불은 약 11억엔에 상당함.
- 룡천역 사건시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액수 10만불보다 훨씬 큰 액수임.
- 세계식량계획(WFP), UNICEF 등을 통해 1-2개월 이내에 실시를 표명함.

(4) 대북 제재법안 발동 연기 및 재일 조선인 문제

- 북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특정선박 입국금지법안 및 외환관리법안 개정안 등에 대해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을 준수하는 한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법안의 성립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제재를 발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일본내 북한동포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에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함.

(5)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 고이즈미 총리는 회담의 상당부분을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일본의 의지 및 국제사회의 동향을 전달하는 데 썼다고 알려짐.
- 고이즈미 총리는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국제적인 확인절차의 중요성을 북한측에 제기함.
- ‘핵을 갖는 것으로 얻는 것과 핵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함.
- 김정일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이상 핵억지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함.
- 김정일 위원장은 문제 해결이 일본의 동맹국 태도에 달렸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중시전략을 드러냄.
- 단, 김정일은 ‘핵을 동결하면 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표명함. 김정일 스스로가 검증을 언급한 의의는 크다고 봄.

- 그러나, 김정일은 핵동결 가능성 언급이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열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함.

(6)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조기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중단되어 있는 북일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조기에 재개한다는 점을 확인함.

(7) 2002년 평양공동선언 실현에 노력

-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제반 문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나간다는 점을 확인함.

3. 납치문제와 북·일 관계의 향후 전개 전망

가. 고이즈미 방북에 대한 일본인의 평가

- 일본의 일반 여론은 고이즈미 방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임.
 -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내각 지지율도 11% 상승하여 58%로 늘어남.
 - 요미우리신문조사에 의하면, 조사자의 63%가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아사히신문의 조사에는 응답자의 67%가 고이즈미의 방북을 평가함.
 -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도 65%의 응답자가 고이즈미의 방북을 평가함.
 - 산케이신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3.6%가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 단, 북일관계의 조기정상화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북한과의 관계 조기 정상화에 대해 61%가 신중해야 한다고 답함.
 -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 일본 일간지의 5월 23일자 사설은 고이즈미의 방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음.
- 아사히신문은, '국교정상화에 신중한 전진을,' 요미우리는 '국교정상화를 마음 졸여서는 안된다,' 마이니치신문은 '5명의 귀국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음. 동경신문은 '납치해결에의 길은 멀다'고 평함.

나. 납치문제의 전개 전망

(1) 가족생환 그룹과 사망자가족간 반응의 교차

- 생환자 가족들은 총리의 노력에 감사하고 평양방문을 평가함.
- 사망자 가족들은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음.
- 5월 22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있었던 가족회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보고회에서 납치자 가족들은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 가족회와 '구하는 모임'은 5월 25일 '제재발동은 안하고 인도지원을 행한다는 불만족스런 결과에 대해 사실상은 '막 내리기'라는 의구심이 들며 강한 분노를 느낀다'는 의견을 발표함.

(2) 親고이즈미 세력과 反고이즈미 세력의 대응

- 고이즈미 방북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고이즈미의 차기를 생각하는 자민당내 중진들에 의한 견제와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 나카가와 경제산업상은 5월 25일 오전 각료간담회에서, '회담이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끝난 것 아닌가 하는 보도도 있다. 더구나, 북한측이 수상이 서는 자리까지 정해주고 김정일 총서기의 배웅까지 한 모양이 되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수상이 갔거늘 실례가 아닌가. 선발대는 도대체 무엇하러 간거냐?'라고 발언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 히라누마 납치의원연맹 회장은 5월 22일 가족회 등과 공동으로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전원의 귀국이 아닌 5명만의 귀국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되었다고 혹평하였음. 그러나, 납치의원연맹 총회에서 이는 지나치게 혹독한 평가라는 논의가 일어나자, '수상의 방북을 솔직히 평가하고 싶다'고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림.
- 고무라 전 외상은 5월 24일 강연에서 '10명에 관한 사항은 실패에 가깝다. 너무 서둘렀다. 물밑교섭으로 좀더 몰아부칠 수 있었다. 준비부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함.

(3) 북한측의 납득할 수 있는 재조사 및 설명에 따라 다른 전개 방향 예상

- 고이즈미 총리는 행방불명자의 안부 확인에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음.
 - 소노다 관방장관과 자민당 아베 간사장은 5월 24일 10명에 대한 조사결과 제시가 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함.
- 고이즈미 총리는 5월 2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부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10명의 재조사에 대해, '국교정상화교섭의 틀 안에서 진행한다'고 밝혀 교섭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힘.
- 사망했다고 판정된 8명에 대한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음. 가족회가 내놓은 북한의 조사결과에 대한 모순점과 의문점중 특기할 만한 점은 아래와 같음.
 - 사망장소가 다 다른데, 사망확인서는 8명중 7명이 같은 병원에서 발행되었음.
 - 아리모토의 생년월일에 이시오카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두 사람의 사인이 연탄가스중독이라고 했으나, 초대소에서 온방은 석탄을 사용하지 않음.
 - 이치가와씨가 익사했다고 했으나, 이치가와씨는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 추워지는 9월에 해수욕을 했다고 함.
 - 마스모토씨는 건강했었는데, 27살에 심장병으로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음.

(4) 궁극적으로는 납치문제의 전면 해결은 북일관계 정상화 과정에 달려있음.

- 북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카드이기도 함.
 - 전전의 죄에 대해 현재의 죄로 반격
-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결과가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북한에 의한 조사 결과가 다시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어 교섭 자체가 난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북·일관계의 진전 전망

- 북일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납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상화교섭에 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단, 핵문제, 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앞서서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리라고는 보기 어려움.
- 고이즈미총리는 5월 2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납치문제가 납득할 만한 형태로 해결되고,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얻어내지 않고서는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함.
- 이는 납치문제의 원만한 해결, 핵 및 미사일 등 안보위협 제거가 북일 국교정상화의 선행조건임을 밝힌 것임.
- 5월 26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고이즈미 총리는 '국교정상화 없이는 본격적인 경제지원이 없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함.
- 단,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재임기간중 북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욕이 강한 것으로 확인됨.
- 야마사키 전 간사장은 5월 22일 저녁 NHK와의 인터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재임기간인 2006년 8월까지 북일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했다고 설명함.

4. 고려 사항

가.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 표명

- 납치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일본과 북한 양측에 도움이 되며, 6자회담의 성사는 물론 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타당함.
- 이는 북한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핵문제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관여를 가능하게 할 것임.
- 북일 양측이 납치문제로 인해 향후 북일관계 개선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양측의 성실하고 진지한 대응이 지속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측의 납치문제에 대한 사실의 부정이나 왜곡된 정보 전달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일본측에 대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함에 유의하여야 함.

나.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핵문제 공동대응의 중요성 확인

-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공동 대응을 촉구해야 할 것임.
 - 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에서 논의될 것임.
- 북한에게도 일본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대담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함.
- 동북아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문제인 점에 비추어, 핵과 납치문제를 분리 해결하는 바탕위에서 한일간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중개자 역할 장려

-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미간 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임. 이에 비추어 일본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미일 3국간 고위급 의견조정에는 부시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가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 관계 개선 움직임이 한일간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일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함.
 - 한일 양국 정상간에 수시로 연락가능한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함.

라. 한반도문제의 장기전략에 대한 한일간 전략적 공감대 확산 노력 배증

- 북일간 납치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북일관계의 급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고이즈미 총리 본인이 북일관계 정상화에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함.
- 한국은 북일간의 수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대북 공조 방안 및 한일 양국의 협력 아젠다를 설정하고 사전에 교감을 늘려가야 한다고 판단됨.

-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의 방향성 및 공동진출 방안, 북일 정상화 교섭 내용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안건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2004. 5. 27

집필 : 교수 박철희
토론 : 교수 고재남
 동북아1과장 서형원
정리 : 연구원 송연수

本 文件은 執筆者의 見解를 바탕으로 ‘열린 外交’의 具顯과 外交政策樹立을 위한 參考資料로 作成된 것으로서 外交通商部の 公式立場과는 無關한 것입니다.